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손석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겸임교수)

미디어 빅뱅이란 말이 나올 만큼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수용자'가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널리즘의 위기는 곧바로 '수용자 복지'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과제다. 이 논문은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서 진실과 공정을 기본윤리로 개념화하고, 한국 저널리즘이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 저널리즘은 진실과 공정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존재 원칙의 위기'로 규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저널리즘을 걱정하는 언론인위원회'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언론학계가 언론 단체와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저널리즘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주제어: 진실, 공정, 수용자복지, 저널리즘, 공론장

1. 문제 제기: 미디어폭발시대의 저널리즘 위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줄이어 쏟아지면서, 미디어 혁명 또는 미디어 빅뱅(Big Bang)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혁명이든 빅뱅이든 분명한 사실은 미디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새롭게 나타난 미디어들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2000년부터 본격화한 인터넷 신문만이 아니다. 휴대전화로 방송을 보고 TV

*2020gil@hanmail.net

로 인터넷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미디어 구분 자체가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는 이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미디어들 사이에 융합도 가속화하고 있다.¹⁾ 이동 중에도 방송을 볼 수 있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와 인터넷 방송인 IPTV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을 예고한다.

미디어가 늘어남으로써 수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는 과거에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해졌다. 적어도 현상적으로 본다면, 미디어 폭증으로 수용자 복지(audience welfare)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쌍방향성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미디어 폭증이 지닌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미디어가 폭증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상징적 기능인 저널리즘은 정작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로 여겨질 만큼 한국 사회에서 위기론은 보편화해 있다. 언론학계에서도 저널리즘의 위기 진단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 차이를 넘어 보편적이다.

예컨대 이민웅(2003: 94)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20가지도 넘는다”며, 이를 객관성·공정성과 관련된 비판, 상업주의와 관련된 비판, 직업윤리와 관련된 비판, 변화와 지속의 역사적 흐름을 읽는 안목의 부족에 관한 비판으로 분류했다.²⁾

1) 인터넷의 영향으로 온라인에 모두 진출한 신문사들도 T-페이퍼(Television-paper)나 E-페이퍼(Electronic-paper)에 관심을 쏟고 있다(김택환, 2005). T-페이퍼는 대형 벽걸이 TV 등을 이용한 신문이며 E-페이퍼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이동형 신문이다.

2) 이민웅은 한국 저널리즘을 부정적으로 분석하며 평가 기준으로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할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언론은 물리적·사회적 환경, 특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둘째, 언론은 지식과 정보로 무장된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춘 시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민주사회의 정통성의 토대가 되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웅이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분류한 네 가지 가운데 첫째로 꼽은 “객관성·공정성과

저널리즘 위기론은 담론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저널리즘 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다름 아닌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2006)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8월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취재 현장을 뛰는 기자들 스스로 한국 신문, 방송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진실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5%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 수치는 신뢰도 1, 2, 3위로 나타난 한겨레(15.0%), KBS(12.3%), MBC(5.0%)를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신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조선일보(4.0%), 중앙일보(3.7%), 동아일보(2.0%)의 신뢰도를 합친 수치보다 한겨레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다. 기자들 스스로 저널리즘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저널리즘을 신뢰하길 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실제 결과도 미디어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기자들이 신뢰하는 언론사

(단위: %)

구분	없다	한겨레	KBS	MBC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타
신뢰도	45	15.0	12.3	5.0	5.0	4.0	3.7	10

출처: 한국기자협회(2006), 창립42주년 기념 전국기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물론, 미디어 폭증이 한국적 현상이 아니듯이 저널리즘의 위기 또한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선도하고 정보화 사회가 가장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에서도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이 국민에게

관련된 비판”으로 든 것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보 및 왜곡보도, 심지어 속임수 보도, 2. 불공정 보도: 특정 정치권력, 경제세력, 사회집단에 대한 편향 보도, 3. 정실주의 보도, 4. 기회주의적 양시양비론, 5. 내용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을 무시한 채 뉴스원만을 이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적 객관주의”(2003: 94).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985년의 41%에서 1999년에는 21%로 떨어졌다(Kovach & Rosenstiel, 2001: 10). 언론의 감시역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67%에서 58%로 낮아졌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5%에서 45%로 떨어져 절반 이하가 되었다. 컬럼비아 대학의 캐리(Carry)가 “더욱 확대된 커뮤니케이션 세계 속에서 저널리즘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듯이 미국도 저널리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미국 신문사의 편집국장들이 “편집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저널리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회사의 경영과 수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Kovach & Rosenstiel, 2001: 10).

주목할 것은 미국 언론계에서 저널리즘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가 폭증하면서 기존 언론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저널리즘의 가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한국 저널리즘 사회에 성찰을 요구한다. 미국 CJR(Columbia Journalism Review)의 기고 담당 편집장인 맥콜람(McCollam, 2006)은 월스트리트의 압력으로 황폐화하고 있는 신문 저널리즘을 진단하며 ‘길은 없는가(A Way Out?)’를 묻는다. 그가 제시한 길이 바로 ‘저널리즘의 가치’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풀뿌리 저널리즘(Grassroots Journalism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강조한 길모(Gillmor, 2006)도 모든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되는 시대에 ‘최선의 전략’으로 미디어윤리의 확립을 강조했다.³⁾

3) 물론, 미디어가 폭증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저널리즘의 윤리를 낡은 문제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대이기에 오히려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길모가 제기했듯이 “언론사와 독자 또는 시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정보의 쌍방향 교류 중 속임수이거나 오류, 또는 거짓 장난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누가 어떻게 걸러 내거나 단속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물음에 길모의 대답은 낙관적이다. 취재보도나 뉴스제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신뢰성과 정확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보나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나 속임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2006년 6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10개국 1,700명의 언론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59회 WAN총회에서도 신문의 위기를 의식해 “신문, 혁신의 새 시대”란 주제를 잡았다.⁴⁾ 미주리 대학 교수 메이어(Meyer, Philip)는 미국 신문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분석(2004: 174~200)한 뒤, 정보화 시대에 저널리즘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저널리즘 윤리임을 강조했다(228~244).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대학의 언론학과는 커리큘럼 혁신을 모색해가고 있다(이재경, 2005).

미디어 폭증시대에 저널리즘의 위기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언론 현장과 언론학계에서 저널리즘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 윤리의 문제가 경시되고 있는 것은 저널리즘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해 보고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안을 찾는 데 선행 과제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 규명에 이어,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 공익성을 담보할 것인가

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길모의 낙관에는 전제가 있다. “이들 새로운 저널리스트가 미디어윤리와 전문성 그리고 공공의 신뢰에 부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존중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다(Gillmor, 2006). 결국 풀뿌리저널리즘(Grassroots Journalism)의 관건도 저널리즘 윤리의 보편적 확산에 있다.

- 4) 제13회 세계편집인 포럼을 겸한 모스크바 총회는 신문 산업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저널리즘을 회복,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독일에서 가장 큰 신문사인 엑셀 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뒤프너 회장은 퀄리티 페이퍼를 지향하는 신문이 생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프너 회장은 또 인쇄나 인터넷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본연만 지켜낸다면 신문산업으로 다 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2006년 6월 21일자.

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저널리즘 위기의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1) 미디어 산업의 위기 연구

한국언론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한국 언론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UR보고서, 1995; 신문의 위기, 2003; 위기의 한국신문, 2005).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비즈니스의 다양화·다각화로 간추려지는 미디어 폭증 현상 앞에서 위기의 초점은 주로 신문에 맞춰졌다. 실제로 신문 산업은 광고와 판매를 비롯해 전체 매출액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장호순, 2006).

미디어 비빔시대를 맞은 신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신문의 ‘상업화·국제화·복합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산업의 측면에서 언론 위기에 접근한 대표적 사례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을 비롯해 신문업계가 모바 일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방송, 잡지 사업은 물론이고 인터넷 사이트의 인수, 합병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이다(김택환, 2005).

그러나 이재경(2004)도 지적했듯이, 미디어 산업을 중심에 둔 연구들은 기사의 문제나 취재의 관점, 기자윤리,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저널리즘적 쟁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언론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구독자 감소, 광고 이탈, 경쟁 격화에 따른 언론사의 존립 기반 붕괴와 같이 ‘비즈니스’ 또는 산업 혹은 정책적 고려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2) 소유구조와 편집의 자율성 연구

언론 위기에 대한 연구가 언론 산업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저널

리즘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언론현업인 단체가 언론학자들에게 공동 연구를 제의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1995년에 언론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활동한 뒤 펴낸 연구보고서가 『죽은 언론 살리기』(1996)다. 위원회 구성원인 방정배·손석춘·유한호·이효성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에서 방정배는 ‘편집권 독립의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대안’(151~194)을, 이효성은 ‘수용자 언론참여의 법적 제도적 방안’(73~102)을, 유한호는 ‘언론매체 소유권의 공공화와 공적통제방안’(103~150)을, 손석춘은 ‘죽은 언론’을 살리기 위한 일선 언론인들의 과제(1~16)를 제기했다. 신문 판매시장의 혼탁상이 저널리즘의 질적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판매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연구(1996)의 연구 성과들이 이어졌다.

전국언론노조의 보고서나 판매시장을 분석한 논문들은 실제로 언론개혁운동의 논리적 기반이 되었고, 그 가운데는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이나 신문유통원 설립처럼 현실화된 것도 있다. 따라서 언론 위기에 대한 연구가 산업적 논리에 치중했다는 분석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논리를 벗어나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지닌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출범(1998)한 뒤,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는 더 활성화했다. 대표적인 연구서가 『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한국 신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이다. 이 연구서에는 김서중의 ‘신문사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비롯해 ‘광고시장 개혁 방안’(임동욱), ‘판매시장 정상화 방안’(정연구), ‘언론윤리 제고 방안’(이재진), ‘전문성 제고 방안’(김창룡), ‘언론피해구제의 효율화 방안’(유일상),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방안’(김택환)들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적 쟁점’에 대한 언론학계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전혀 없지 않다. 산업 연관성이 높은 언론학의 특성상 연구의 의제 결정과 생산 과정이 매체산업의 논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매체 산업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제들을 다룬 연구가 양산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문종대, 2001). 그 결과 이론 및 언론철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론학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인 저널리즘 윤리나 내용, 역사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위축되고 있다

소유구조나 편집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법제적 해결 방안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저널리즘 위기는 소유 구조나 편집의 내적 구속에서만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저널리즘의 기본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3) 저널리즘의 정파성과 책임 연구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가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분석은 이민웅(2003), 이재경(2004), 이준웅(2004), 강명구(2005)의 연구로 이어지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파성 문제의 위기를 강조해 온 연구자는 이민웅과 이재경이다. 두 연구자 모두 저널리즘이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직업상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로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된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또 그러한 정보에 대한 수준 높은 분석과 해석을 통해 민주사회의 정통성의 토대가 되는 여론을 형성하여 생활인으로서의 국민,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위해 그들의 ‘알권리’를 대행해야 한다(이민웅, 2003: 247)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20가지도 넘는다고 분석한 이민웅은 그 연장선에서 언론개혁에 동의한다. 다만 “비제도적 공간에서 유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개혁에 관한 ‘끼리끼리’ 담론을 제도적 공간(국회)으로 수렴하여 진정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01). 법적 제도의 개혁은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회 안에 독립적인 ‘가칭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야, 각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102).

하지만 이민웅은 2001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도 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을 때는, 정작 반대했다. 신문에 기고한 칼럼 (“신문개혁의 주체는 독자다”, 『중앙일보』, 2002년 2월 14일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언론개혁의 주체가 되는 일종의 조합주의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를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자신의 주장과 대통령의 발언이 거의 같은 내용인 데도, 포퓰리즘으로 반대할 만큼, 언론개혁 논의 자체가 학계에서도 정파성의 틀에 갇혀있음을 입증해준 사례다. 결국 신문사들의 반발 속에 언론개혁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떨어졌다.

물론, 한국 언론에 정파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친화적인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언론사나 언론인들의 기사와 논평에서 정파성이 담겨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파성의 잣대로 저널리즘 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일면을 지나치게 전면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정파성의 틀로 분석할 때, 저널리즘에 대한 분석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오류를 범할 우려는 이재경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재경(2004)은 저널리즘의 위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위기를 기사의 위기로 규정한다. 기사의 위기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언론사가 정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대상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편집관행”을 들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노골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대표적인 보도대상 영역들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과 한미관계 관련기사들, 북한 핵문제 관계 사실들과 경기회복에 관계된 기사들”을 꼽았다. 그 결과 이재경이 파악하는 ‘위기’는 “각 매체사의 사설이나 칼럼들이 주장하는 의견

기사들과 맞물려 특정신문을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으로 이름 지우는 역할을 해왔고 지난 10여 년 동안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념적 편 가름을 받아 들이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강조했다듯이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과연 이 세상에 ‘진보적 사실’이 따로 있고 ‘보수적 사실’은 또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이재경의 분석처럼 “만약 이것이 보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사회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인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이 될 것이고, 현실에 대한 논리적 토론도 성립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재경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과 한미 관계 관련기사들, 북한 핵문제 관계 사실들과 경기회복에 관계된 기사들”에서 단지 정파적 대결상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어떤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보도와 논평인지 더 들어가는 분석을 회피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재경과 이민웅 모두 ‘사회제도로서의 저널리즘의 위기’를 주장하고 ‘현대 사회의 핵심인 공론장(public sphere)’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가(state)와 개인(private) 사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들을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는 특별한 마당’으로서 공론장이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업화하거나 파당화 또는 사유화”(이재경, 2004) 되고 있다는 주장에 머물 뿐, 파당화가 저널리즘을 왜곡하고 있는 양태에 대한 분석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는다.

정파성의 문제와 달리 저널리즘의 위기를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다. 한국언론학회를 책임연구자로 한 『변화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2005)가 대표적 연구서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구이지만, 여기서도 저널리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저널리즘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없을 때,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논의가 자칫 공허하게 변질되거나 정파성의 위기처럼 모두 잘못이라는 분석으로 갈 우려가 있다. 누가 또는 어떤 기사가 저널리즘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외면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까닭이다. 저널리즘의 위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위기’가 기사의 위기라면, 그리고 기사가 독자나 시청자에게 현실을 인식시키는 기초단위라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주요 쟁점을 저널리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4) 위기의 실체와 연구방법

지금까지 저널리즘 위기에 대한 기존연구를 언론 산업의 위기, 소유구조와 편집 자율성의 위기, 언론의 정파성과 책임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세 가지 접근방법과 연구는 각각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부문별로 꼼꼼히 분석하고, 저널리즘 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 연구방법과 달리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개념으로서 실체(substance)는 일찍이 칸트(Kant, I.)가 ‘실재하는 모든 것, 곧 사물의 실존에 속하는 것의 기저’로 정의했듯이, ‘변화무쌍한 물질의 근저에 놓여있는 지속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이른다(임석진, 1983: 231).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라 할 때, 그 ‘실체’는 철학적 개념에 비해 느슨한 개념이다. 저널리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의 실체’나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로서 실체, 곧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의 개념이다. 국어사전의 정의로서 실체개념은 “여러 가지 속성이 귀속되는 기체(基體: hypokeimenon)”로서 철학적 실체 개념과 이어져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분석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여러 위기의 양태를 넘어 위기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의미다.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 대해서도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저널리즘은 통상 ‘활자나 전파를 매체로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

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민웅(2003)과 이재경(2004)도 강조했듯이, 저널리즘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제도로서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국 언론계가 공동연구 결과물로 펴낸 *The Elements of Journalism*은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제를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free and self-governing)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Kovach and Rosenstiel, 2001: 12)이다. 기실 미디어 폭발 시대에 저널리즘의 존재가 더욱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존재 원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저널리즘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게 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 점에서 그것을 저널리즘의 실체적 위기로 규정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을 분석하는 잣대나 기준은 결국 철학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실체의 개념 정의에서 시작해 무엇이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 근거한 기본 윤리인가를 규명하고, 한국 저널리즘이 그 원칙과 윤리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구체적 기사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 저널리즘은 산업의 위기나 정파성의 위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과 기본 윤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실체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Statement of Principles)의 제1조가 선언하고 있듯이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의 내용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존재원칙이라는 시각(Kovach and

Rosenstiel)과 이어진다. 자유롭게 스스로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변명에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윤리강령 제1조에서 우리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기초윤리를 추출해낼 수 있다.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는 ‘진실’이다.⁵⁾ 그리고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변명에 봉사”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은 ‘공정’이다.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윤리강령 제1조에서 진실과 공정을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로 추출했지만, 기실 그 두 개념은 김지운의 연구(2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 윤리강령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다.⁶⁾

문제는 저널리즘의 보편적 가치로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이 한국 저널리즘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1) 진실의 위기

진실은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로서 연구자들 사이에 ‘거의 완전’에 가까운

-
- 5) 미국 언론계의 공동연구 결과물인 *The Elements of Journalism*도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로 ‘진실 추구’를 제시했다(Kovach and Rosenstiel, 2001: 36~49).
- 6) 김지운은 세계 6대륙, 세계 주요 종교를 배경으로 한 언론윤리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20~30개국의 언론직업단체 및 유수 언론기관들의 윤리강령-요강 분석,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달리하는 24명의 서면설문들을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의 보편적 언론윤리’로서 네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2004, 148~150). 진실, 공정, 민주주의, 인권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진실과 공정이 구현되는 사회라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가치라는 점에서 김지운의 분류는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윤리강령1조에서 연구자가 추출한 가치에 보편타당성을 더해 준다. 실제로 진실과 공정이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진실이나 공정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합의'가 이뤄진 가치다(김지운, 2004: 156). 미국 언론윤리학회에서도 “진실(truth)은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가장 으뜸가는 표어”다(Merrill, John, 1997: 105).

진실은 저널리즘의 윤리 이전에 저널리즘의 정의와도 곧장 이어진다. 저널리즘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실제(actual) 세계의 모습(feature)에 관한 진실한 진술 또는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음성, 영상 형식의 저작된 텍스트”(McNair, 1998: 4)로 규정할 때, 진실은 저널리즘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다.

진실 보도는 단순한 사실 보도와 구분되거나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사실에는 존재론적으로 객관적 사실, 주관적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보도, 객관보도는 적절한 개념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이민웅, 2003: 199). ‘사실에 대한 보도’ 또는 ‘보도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실보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한 현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그 현실을 구성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표상하여 그 사실에 최대한 근접할 때” 진실 보도라고 할 수 있다(이민웅, 2003: 200).

리프만(Lippman, Walter)은 언론학의 고전이 된 *Public Opinion*에서 진실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진실의 기능은 숨어있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 그 사실들의 연관성을 드러내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현실의 상(a picture of reality)을 보여주는 것이다(1954: 358).

진실에 대한 리프만과 이민웅의 정의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때, 한국 저널리즘⁷⁾은 진실보도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을까. 앞서 이재경(2004)이 ‘정파성의

7) 여기서 ‘한국 저널리즘’의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보기’로 분석할 주요 사안에 한국의 모든 저널리즘이 반드시 일치된 보도와 논평을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사이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 저널리즘’이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분석한 이유는, 특정신문 한두 개를 제외한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정

위기로 든 ‘북한 핵문제’ 관련 기사와 논평을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⁸⁾ 사이에 불거진 핵 문제는 자칫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저널리즘이 진실 보도에 힘을 기울여야 할 의제(agenda)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현실 규정자’로서 한국 저널리즘은 문제가 되는 현실을 개념화하는 데부터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리영희(2005)는 언론이 “북핵문제”로 규정하는 게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단지 언어학적 해석으로서 ‘북한과 관련한 핵문제’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은 오류”이고 “언론들이 북핵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 동북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 보이는 것은 내용과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또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와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리영희는 언론사들이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로만 보아서” 대다수 독자들도 잘못 알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한 핵전략과 대북정책의 인과관계”를 강조했다.⁹⁾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북미 핵문제’로 규정해야 옳다는 것이다.

대북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호’들로 한국 저널리즘의 논리적

도의 차이만 있을 뿐 뚜렷하게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인용하겠지만, 한국언론재단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수용자 의식 조사’도 한국 언론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묻고 수용자도 그 문항에 따라 보편적으로 ‘한국 저널리즘’을 평가해 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저널리즘은 특정 매체의 차이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불신 받고 있다. 다만 이 논문의 전개과정에서 근거로 제시한 참고문헌들은 매체별로 구분해 분석한 연구들을 선택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담보했다.

- 8) 언론현업인 3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해방 50돌을 맞아 공포한 통일언론실천선언(1995)의 보도실천요강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표기할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의식해 ‘남북 대화’나 ‘북미관계’처럼 ‘북’으로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 9) 리영희는 “수구 보수언론들이 이러한 명칭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대중의식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부시 대통령의 명분과 명칭 또한 조작과 왜곡된 경우”라고 비판했다(리영희, 2005).

전개를 도식화하면, ‘북미 핵문제’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틀(frame)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쇄국주의’ → ‘주민 아사’와 ‘체제불안’ → ‘체제유지를 위한 체제외적 긴장감 조성’ → ‘핵무기 개발’로 ‘체제수호’ → ‘국제사회의 미아’ → ‘반인권국가’ → ‘미국의 제재’

한국 저널리즘의 ‘틀’로 보면, 모든 갈등과 긴장은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에서 비롯한다. 그 보도와 논평의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담론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친북’이나 ‘좌경’ 또는 ‘김정일 추종 세력’이라는 ‘기호’로 몰아붙인다.

하지만 북미 핵문제를 둘러싼 사실(fact)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단순 논리의 틀이 지닌 문제점은 쉽게 드러난다. 예컨대 핵무기 개발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에 대해 한국 저널리즘은 ‘김정일의 호전성’과 ‘뒤통수 맞은 참여정부’, ‘햇볕정책에 배신’ 등과 같은 기호로 보도하고 논평했지만, 정작 짧은 성명의 전문만 읽어 보아도 전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2월 10일 발표된 외무성 성명은 “수차 언명해 온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으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 뒤 취임식에서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 목표로 선포하고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고 비판했다.¹⁰⁾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다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체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전문은 『연합뉴스』(2005. 2. 10)에 실렸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거나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 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 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 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라는 언명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교 수립을 갈망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 것”임을 몇 차례에 걸쳐 밝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전에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평화공존만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맞서 있다. 외무성 성명의 마지막은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려는 최종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현실을 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미 핵문제’가 올바른 현실규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북미 핵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핵문제를 대처해나가는 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에서도 경직된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적 연구가 아닌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이 팽팽하게 대립된 두 논리 가운데 한쪽만을 부각하고 다른 쪽 논리는 아예 공론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진실을 온전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남북공동선언(2000) 이후 북이 미국과 국교 수립을 원하고 또 그것을 공표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이 쇄국주의를 고집한다는 데서 출발한 한국 저널리즘의 ‘틀’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편향되고 일방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단순 논리의 틀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 저널리즘이 제시하는 북미 핵문제 해결 방안도 단순논리의 연장이다. 한국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호들로 구성해 보자.

‘한미동맹 강화’ → ‘한미일 공조’ →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 포기’ → 북한의 ‘핵무기 포기’ →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새국주의 정책 포기’

해법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보도 틀과 어긋나는 담론이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친북’이나 ‘좌경’ 또는 ‘김정일 추종세력’이라는 ‘기호’로 배제했다. 결국 그 논리는 북의 핵무기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틀에 지나지 않았다. 북미 핵문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와 언론이 빚고 있는 갈등도 기실 여기서 비롯된 현상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북미 핵문제와 관련된 보도와 논평을 ‘언론의 정파성’이나 ‘과당성’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재경, 2004)은 표면적 분석이다. ‘친여’언론과 ‘야당’언론, 또는 ‘친북’이나 ‘반북’, 혹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정파 문제 이전에, 진실의 문제가 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¹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논리로 북미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자칫 민족적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¹²⁾

11) 북미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분석으로는 양문석(2003)과 손석춘(2005b)의 연구가 있다. 양문석은 KBS를 비롯한 방송보도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미국 ‘매파’ 취재원의 발언만 전달”한 반면에 이북에 대해서는 적대적 보도태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1994년 합의된 제네바 협정을 미국이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 방송3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이 마치 북쪽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양문석은 북미간의 갈등이 일차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방송뉴스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북미간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2) 2003년 4월에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대북 비밀메모’가 알려지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의 대북 인식과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럼스펠드가 백악관 수뇌부에 제출해 회람된 ‘메모’는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게 핵심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도하며 이라크 정책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불거졌던 정책 대결이 북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메모는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논평함으로써 메모가 실존했고 회람도 사실이었음을 시인했다. 미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 핵무기 포기 압력을 지난 해 이라크에 유엔의 전면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리프만은 물론, 이민웅의 ‘진실 보도’ 개념에 비추어보더라도 복미 핵문제 보도는 진실 보도와 동떨어져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을 구성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표상하여 그 사실에 최대한 근접할 때”를 진실 보도라고 할 때, ‘현실을 구성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종합적으로 표상하여 그 사실에 최대한 근접’하려는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각적 정보 접근’이나 ‘종합적 표상’을 위한 토론 자체를 ‘색깔공세’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저널리즘이 냉전 논리의 틀, 독일 통일과 동구권 몰락 이후 흡수통일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추는 것은 보수적인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의 보고서(2000: 237)에서도 제기될 만큼 절실한 과제다.

<표 2> 수용자들의 언론 신뢰도

(단위: %)

	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004년	0.2	19.3	48.8	30.6	1.6
2002년	0.9	24.4	28.8	42.9	3.1

출처: 한국언론재단(2004), 수용자 의식조사

진실과 거리가 멀거나 동떨어진 보도관행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그대로 수용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한국언론재단(2004)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매우 신뢰한다’(0.2%), ‘대체로 신뢰한다’(19.3%)를 합쳐 19.5%에 불과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언론의 신뢰도는 25.3%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0.6%)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6%)를

부시 대통령과 럽스펠드 장관은 지금은 외교수단을 강구할 때라고 주장하면서도 군사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뉴욕타임스』, 2005년 4월 21일자).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한국 언론에서 무시되거나 단신처리 된다는 데 있다.

합쳐 32.2%에 이르렀다. 48.8%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2) 공정의 위기

미디어 윤리에서 ‘공정(公正)’ 또한 ‘진실’ 못지않게 누구나 동의하는 개념이다. 물론, 공정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가를 엄밀하게 규정하자면 이론적 논쟁의 지점이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 윤리로서 공정의 개념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공정의 개념을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fairness)의 사전적 뜻은 “공평(公平)하고 올바름”이다. 여기서 ‘공평’은 갈등 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의미를 지닌다. 공평(impartiality)이란 한자어나 영어 뜻 그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황을 이른다.

그런데 공정의 사전 정의에는 ‘공평’에 더해 ‘올바름’이 있다. 올바름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정(正) 또는 정의(justice)의 개념이다. 따라서 ‘공정’은 공평과 올바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공평에 머물고 있는 보도나 논평을 ‘소극적 공정’으로, 공평에 더해 올바름까지 숙의한 보도나 논평을 ‘적극적 공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름인가에 있다. ‘올바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고 또 그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널리즘 윤리로서 공정에 대해서는 언론 현장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최소한의 합의’가 있다. ‘억강부약(抑強扶弱)’이 그것이다.

억강부약의 가치는 보수적인 관훈클럽(2000)이 낸 ‘한국 언론의 좌표: 한국 언론 2000년 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관 또는 잘못된 관점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 소수계층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언론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어떤 입장이나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의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언론이 소수의 의견이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해야 한다

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덕이 소수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184).

관훈클럽 보고서는 더 나아가 “특히 한국 언론은 중산층을 주된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는 한편 언론인 자신들도 중산층에 편입되어 있어 주로 중산층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면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소수 계층의 의견과 이익은 구조적으로 배제”(185)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 저널리즘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문제를 보도하는 데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2005년 11월에 연이어 일어난 농민들의 자살과 집회 시위 중 타살 사건,¹³⁾ 그리고 2006년 7월에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타살 사건¹⁴⁾에서 한국 저널리즘은 노사 사이의 소극적 공정성도 지키지 않았다. 생존권을 지키려고 집회와 시위에 나선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낮에 ‘공권력’에 의해 타살 당했는데도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지 않은

13)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분석으로는 정연우(2005)의 논문이 있다. 정연우는 “한국 언론에는 농민이 없다”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고 전용철씨 사망과 관련해 단 한 건의 기사도 찾아 볼 수 없는 등 이번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고 분석했다. 농민의 시위가 거세게 나오자 비로소 신문과 방송에서 농업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그나마도 기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균형성, 완전성, 사실성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방송 또한 시위의 폭력성만 부각했고 사망사건 보도에서도 사인 규명, 폭력 재발 방지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농민문제 보도와 관련된 내용분석으로 손석춘(2006)의 연구가 있다.

14)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분석으로는 정연우(2006)와 손석춘(2005a)의 연구가 있다. 정연우(2006)는 포스코 건설노조 농성 관련 보도를 틀 이론으로 분석하면서 기업, 정부, 지배 엘리트, 합리적 시민은 문제 해결자로 표상되고 그에 맞서는 노동조합, 진보주의자 또는 집단 등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로 표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의 요구 사항이나 발단, 사건의 근본적 배경 등은 외면하고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 중태에 대한 보도는 축소 외면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손석춘(2005a)은 한국 언론이 노사 사이에 최소한의 균형조차 지키지 않는 보도 사례들을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저널리즘의 목인과 축소 보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국 언론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¹⁵⁾

역강부악이 ‘최소한의 공정’이란 말은, 사회적 약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정의라는 뜻은 아니다. 권력이나 자본을 지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커뮤니케이션권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저널리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공평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노사관계나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저널리즘을 분석하는 데도 정파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다. 한국 저널리즘은 다음과 같은 구호적 기호와 단순논리로 보도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노무현의 친노(親勞)정책’ → ‘노동운동의 과격화 방지’ →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악화’

여기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친노동’이라는 전제부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언론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 10월 사용자의 성실한 임·단협 협상을 촉구하며 45m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 올라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목매 자살하며 남긴 유서가 대표적이다.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 5백억 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05만 원. 그중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팔십 몇 만원. 근속 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헛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인터넷신문 『레이버투데이』, 2003년 10월 20일).

중요한 지점은 한국 저널리즘의 노사관계 보도와 논평에서 사용자의 불법에는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노동자의 불법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사례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넘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 사안을 다루는 데서 기계적 균형, 소극적 의미의 공평(impartiality)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 저널리즘은 억강부약이 아니라 오히려 ‘억약부강’에 가깝다. 언론계의 외면과 언론학계의 무심으로 억강부약이 공정성의 주요 가치라는 사실도 저널리즘 현장에서 ‘낮선 담론’이 되어가고 있다.

‘성장이나 분배냐의 경제정책 중심을 놓고도 언론의 차이를 정파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GDP의 8.3%(2000년)를 사회복지에 지출한 데 비해 다른 국가들의 평균은 23.4%에 이른다. 강명구(2005)는 “이런 복지 수준에서, 거기에 기초한 사회안전망의 수준에서, 성장이나 분배냐를 대립적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석한다.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명제도 복지지출이 미약한 수준일 때는 논의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다. 진실의 가치를 논의할 때도 확인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정파성의 문제 이전에 공정의 가치라는 기본윤리의 문제가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공정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국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커닝햄(Cunningham, Brent., 2005)은 미국의 신화에 젖어 있는 ‘주류언론’을 비판한 뒤 ‘편집국 밖의 저널리즘’을 강조한다. 그는 주류언론의 편집국이 너무나 자족감에 젖어 있다면서 핵심은 비주류들과 함께 하고 분산된 ‘점’들을 잇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Working the Fringe)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진실과 공정의 가치는 구분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된 가치다. 그만큼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고급지’로 불리는 워싱턴포스트가 취재 보도에서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제시한 항목을 보면, 그것이 진실과 이어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김지운, 2004: 176~177).

- ① 기사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한 의의를 지닌 사실들을 빠뜨리면 공정하지 않다.
- ② 기사는 의의 있는 사실들을 제치고 본질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면 공정하지 않다.
- ③ 기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용자들 오도하거나 심지어 속이면 공정하지 않다.

메릴(Merrill, John)이 언론보도의 윤리를 ‘TUFF’로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실 되고(Truthful) 편향되지 않고(Unbiased) 정보제공이 충분(Full)하고 공정(Fair)해야 한다는 것이다(175~176). 그 공식을 한국 저널리즘의 구체적 보도에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앞서 든 보도사례들의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2004)의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낮았다. 언론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12.0%로, 2년 전인 2002년(20.6%)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졌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46.7%에 이르렀다. 이는 수용자의 10명 중 1명만이 언론을 공정하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표 3> 수용자가 보는 언론 공정성

(단위: %)

	매우 공정하다	대체로 공정하다	보통이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2004년	0.1	11.9	41.3	44.7	2.0
2002년	0.4	20.2	27.4	47.0	5.0

출처: 한국언론재단(2004), 수용자 의식조사

언론광장(2004)이 현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변하고 있다”는 대답은 34.4%였고, 64.2%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특히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간부급(53.3%)보다 평기자(68.1%)가 더 많은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4. 저널리즘 위기의 극복 방안

한국 저널리즘은 ‘북미 핵문제’나 ‘사회적 약자’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기본 윤리인 ‘진실’과 ‘공정’을 잣대로 판단할 때,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이 “사람(수용자)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Kovach and Rosenstiel, 2001: 12)임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저널리즘의 문제점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용자인 사회구성원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의 제1조를 거듭 새겨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이 저널리즘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거나, 그에 대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도록 일방적 정보만 제공받는다면, 그것 이상으로 ‘수용자 복지’¹⁶⁾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 대응해 나가는 데 필수조건인 저널리즘을 정립하려면, 언론학계와 언론계가 유기적 결합으로 저널리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16) 수용자복지(audience welfare)는 방송 쪽에서 논의되어온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수용자 주권 개념이 법과 제도 안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수용자복지는 미디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보장받을 권리이다(박은희, 2005: 103~104).

1) 저널리즘 연구와 교육의 강화

한국 저널리즘에 나타나고 있는 실체적 위기는 언론인들 자신의 책임이 일차적이고 결정적이지만 저널리즘 현상을 연구하는 언론학의 책임도 적지 않다. 사회과학으로서 언론학이 사회 현상의 하나인 언론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연의 일이다. 하지만 언론학계에서 저널리즘 연구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저널리즘 연구가 약화되는 징후는 기실 한국 신문학회가 1985년 한국언론학회로 이름이 바뀌고 1992년 제27호부터 『신문학보』가 『한국언론학보』로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저널리즘’ 전통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전환 과정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및 그들의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최창섭, 1997: 14). 그 후 해가 거듭될수록 경제적 가치에 따라 미디어산업이 재편되고, 그에 따라 미디어가 필요로 하는 인력시장의 수요가 대학 언론학과의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그 결과, 저널리즘 분야보다 ‘산업 수요’가 많은 텔레비전 및 광고, 뉴미디어와 관련된 연구가 대학에서도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가 연간 2회 이상 간행해온 『언론학보』에 1995년~2003년 10월(통권 47-6호)까지 게재된 총 논문편수 207편 가운데 언론윤리가 주제인 논문이 단 1편도 없는 사실(김지운, 2004: 13)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저널리즘 연구의 위축은 그대로 대학에서 저널리즘 교육의 약화로 이어진다. 충격적인 현실이지만 한국 언론사(言論史)가 아예 커리큘럼에 없는 대학마저 있는 게 그 단적인 보기다. 물론, 언론학과의 교육이 언론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송건호(1974)는 ‘훌륭한 언론인’을 길러내기 위해 언론학과의 “강의 목적은 사회와 인간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커리큘럼에 일대 개혁을 촉구했다. 교과과정의 3분의 2를 사회과학 강좌로 채우고, 저널리즘 실무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교과과정의 3분의 2를 ‘사회와 인간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송건호의 제안은 진실과 공정이라는 저널리즘의 철학을 함양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저널리즘 실무 교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강수(1973/2000)는 일관되게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언론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전문직 언론인 양성에 있다”면서 한국 언론학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강수는 1973년에 발표한 논문과 2000년에 발표한 논문 사이에 차배근(1989)의 논문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도 “교육의 방향설정문제, 신문방송학 커리큘럼의 문제, 실무 담당 교수의 문제, 실무 실습 등 교육시설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개탄한다.

문제는 대학에서 저널리즘 위축의 흐름이 새로운 미디어들의 폭발적 증가로 더 가속화하는 데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 재판’의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민규(2001)는 신문방송 교육의 특성화 방안으로 ‘인문학적 기본교육의 강화’를 꼽았다. 현실적응에 필요한 자신의 의사표현능력 배양과 철저한 윤리의식, 기본적인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습교육의 확대에도 동의하지만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의 교육이 제대로 된 실기교육이라는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위주의 실기교육이 예비 언론인으로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송건호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경(2005)은 미국의 대학뿐만 아니라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학과 비교해도 경쟁에서 떨어지는 한국 대학의 커뮤니케이션학 전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교과 과정을 바꾸는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저널리즘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언론윤리 과목과 법률제도에 관한 과목들을 ‘필수 이론과목’으로 설치하고, 언론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기사를 축적할 수 있는 현장실습 과정도 정규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은 언론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사안이다.¹⁷⁾

“언론계에서 유능한 기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기자의 대부분은 신문학과

17) 한국 대학의 언론 관련학과 커리큘럼 분석은 이재경(200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아닌 다른 인문 사회과학계 졸업생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송건호(1974)의 지적이 30여 년이 흐른 오늘도 여전히 언론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저널리즘 교육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진단에 무게를 실어 준다. 하지만 언론학계가 저널리즘 현장과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것은 단지 저널리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2)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저널리즘 현장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좋은 보기는 언론현업인 3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연대기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출범(1998)에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적극 참여해 온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 언론운동 단체들과 더불어 언론개혁 입법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왔다.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운동은 통합방송법 제정에 이어 신문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유구조의 민주화나 편집의 자율성 확보는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형식적 권고 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필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입법운동은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법제 개혁과 더불어 저널리즘 윤리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의 기초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지 않는다면,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입법조차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이미 신문법 제정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언론개혁 입법’의 목적이 저널리즘의 윤리 정립과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입법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필요조건이다.

여기서 언론광장(2004)의 설문조사에서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들이 그 이유로 “회사의 당파적 보도 경향 때문”(40.9%)을 많이 꼽은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기자들(76.9%)도 그 이유로 “회사의 당파적 보도 경향 때문”(6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 저널리즘을 진실과 공정성의 존재원칙 위에 다시 세우는 과정에 언론사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¹⁸⁾

3)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의 ‘각성’

한국 저널리즘을 질적으로 높일 실천적 주체는 저널리즘 현장의 언론인들이다. 언론학계에서 아무리 저널리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이 진전되더라도 언론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와 언론학계의 유기적 결합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한국 저널리즘이 단순히 ‘정파’나 ‘보수 대 진보’에서 벗어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음을 언론학계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로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집인협회)에 전달해야 한다. 실제적 위기에 놓인 저널리즘을 살려내려면 기초윤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저널리즘 현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분석과 성역 없는 비평이 학계에서 권장되고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언론단체들과 소통을 이뤄야 한다.¹⁹⁾

18) 한국언론재단(2004)의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신문·방송매체의 저널리즘상 문제점으로는 정치적 편파성과 자사 이기주의 등이 지적되었다. 신문의 경우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이라는 응답이 2.78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2.72), ‘돈과 힘 있는 사람 입장을 대변한다’(2.68) 등이 지적됐다. 방송보도 또한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2.75)가 가장 많았고, ‘돈과 힘 있는 사람 입장을 대변한다’(2.69),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2.68), ‘정치나 경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다’(2.62)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19) 언론을 비평하는 잣대가 정파적일 때 소통은 이뤄질 수 없다. 저널리즘의 원칙과

무엇보다 신문 소유주나 경영자들이 저널리즘의 위기를 실체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주도해 제정한 윤리강령에 오늘의 언론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스스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학계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터넷, 케이블, DMB의 확산으로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는 갈수록 커질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권기덕·김재윤, 2006).

전통적으로 산업으로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Cunningham, 2005; Gillmor, 2006; Kovach & Rosenstiel, 2001; McCollam, 2006; McNair, 1998; Merrill, 1997; Meyer, 2004). 미국의 미디어자산관리 및 투자전문가인 루더퍼드(Rutherford, James)조차 “무엇보다도 신문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비즈니스이며 그 핵심 부문은 바로 편집 쪽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했다(McCollam, 2006).²⁰⁾

메이어(Meyer, 2004: 228~244)가 ‘저널리즘 살리기’의 방법으로 저널리즘 윤리의 정립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세울 주체도 신문사의 소유주나 주주들이 아니었음을 한국의 신문 발행인들이나 편집인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언론의 경영진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곧 공익에 충실한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의 헌신적 노력에 기대”를 거는 이유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의 열린 마음과 숙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윤리에 근거한 비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파적이거나 정파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비평이나 실천은, 언론학계에서 비평이 활성화할 때 ‘자연 도태’의 과정을 밟을 것이다.

20) 루더퍼드(Rutherford)는 『뉴욕타임스』를 보기로 든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신문용지 배급제가 시행되면서 신문사들은 제한된 지면에 광고와 기사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광고지면을 확대한 반면에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선택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때쯤 『뉴욕타임스』는 신문시장을 석권했다는 분석이다(McCollam, 2006).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온전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나서도록 하는 데 ‘각성’시키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학계일 수밖에 없다. 진실과 공정이라는 기초 윤리조차 지키지 못함으로써 <표 1>, <표 2>, <표 3>에서 보았듯이 수용자는 물론이고 기자들 자신에게도 불신 받고 있는 한국 저널리즘이 스스로 ‘비판언론’을 자처하는 현실에 대해 언론학계가 일치된 비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특정신문 죽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저널리즘, 더 나아가 공론장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성숙의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한 과제다.

5. 결론

지금까지 미디어폭발시대에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데 이어 먼저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존재 원칙’의 차원에서 파악했다.

이어 우리 시대의 주요 의제(agenda)인 복미 핵문제와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평에서 저널리즘이 진실과 공정이라는 두 기본윤리에 어긋나고 있음을 분석했다. 결국 저널리즘의 위기는 미디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 복지가 원천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언론학계가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비평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언론학과 커리큘럼을 재편해야 하며, 언론 단체들—특히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그들이 저널리즘의 질적 발전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 이 연구에서 실체적 위기로 진단한 근거가 복미 핵문제와 사회적 약자 문제로 제한된 것은 내용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한국 저널리즘의 실체적 위기는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인 독자와 시청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결코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 저널리즘이 수용자들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았는가는 몇몇 상징적 사건들이 웅변해 준다. 1960년 4월 혁명 때 신문사가 불탔던 사실, 1980년 5월 항쟁 때 방송사가 화염에 휩싸였던 사실, 19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신문사에 돌이 날아 든 사실은 저널리즘의 위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입증해 준다. 꼭 정치적 전환기만은 아니었다. 1970년대 대학가에서 언론회형식이 벌어진 사실이나, 1980년대에 전 국민으로 퍼져갔던 ‘KBS시청료 거부운동’은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사에 수용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실증해 준다. 87년 6월 항쟁 뒤 저널리즘이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관훈클럽 보고서’도 강조했다듯이 한국 저널리즘은 여전히 냉전논리의 틀(frame)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보도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외면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론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역설이지만 그만큼 수용자들의 의식이 보편적으로 성숙했음을 뜻한다. 한국 저널리즘의 전개 과정에서 큰 흐름이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판단이 아닌 ‘실체적 위기’가 비로소 드러나고 이에 맞서 다양한 수용자 운동이 벌어질 만큼 저널리즘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론학계와 언론계의 유기적 결합으로 저널리즘을 정립하는 과정에 수용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언론학계 일각에서 저널리즘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명구(2005)는 ‘민주적 공론장을 위한 언론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가 주축이 되고 “언론학회와 같은 혹은 여러 학회가 연합한 전문가집단, 정당, 경영자와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참여”해 이를 통해 민주적 공론장의 철학적 기반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정파성의 문제로 논의가 왜곡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활동은 차기 정부까지 지속 되도록 하고 최종보고서도 차기 대선 이후에 발표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재경(2004)도 위기 극복이 개별 신문이나 몇몇 언론인들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언론과 공론영역의 가치와 그들의 존재 원칙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그로부터 언론에 관한 기본 철학과 행위 기준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정부,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 모든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 그리고 시민의 대표 등의 참여가 필요”하며 전체 과정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작업 자체가 전 국민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문맥에서 미국 언론계가 *The Elements of Journalism*을 펴낸 과정은 시사적이다. 1997년에 미국의 주요 신문사 편집인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수한 언론학자들, 저명한 작가들 25명이 모여 미국 저널리즘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Committee of Concerned Journalists)’를 구성했다. 그 뒤 3년 동안 3,000여 명이 참석한 공개토론회를 21회나 열었고, 300명이 넘는 언론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회의를 통해 ‘우수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와 언론사(言論史)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Kovach & Rosenstiel, 2001: 10~12).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이자 원칙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언명은, 미국 언론만이 아니라 한국 저널리즘에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미국 언론에 비해 수용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인 자신에게도 더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과제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저널리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숙의(deliberation)의 ‘마당’²¹⁾을 만드는 데 언론학계가 적극

21) 저널리즘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field, 마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는 이 논문의 영역을 넘어선 주제다. 언론학과 언론단체들이 한국 저널리즘의 실제적 위기에 공감하고 저널리즘의 질적 발전을 숙의하는 열린 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도출하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언론개혁과 관련한 입법의 문제도 그 열린 마당에서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할 한 방법으로 새롭게 숙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나서지 않는 한, 저널리즘의 실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수용자 복지 훼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05). 언론의 당파성.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호.
- 강미선·김영욱·이민규·장호순 (2003). 신문의 위기? 진단과 처방. 서울: 한국언론재단.
- 강상현 (1993). 한국 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완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0호.
- 강미선·김영욱·김영주·이은주·임영호·황용석 (2005). 위기의 한국 신문: 현황 문제점 지원 방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 관훈클럽 (2000). 한국 언론의 좌표: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보고서. 서울: 관훈클럽.
- 권기덕·김재윤 (2006).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산업.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554호, 2006. 5.
- 김지운 (2004). 글로벌시대의 언론윤리: 보편가치의 모색.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창룡 (2006. 8. 19). 한국언론 신뢰회복 시급하다. 『미디어오늘』.
- 김택환 (2005). 미디어빅뱅, 한국이 바뀐다. 서울: 박영률출판사.
- 리영희 (2005. 11. 17). 6자회담의 성과와 한반도 정세: 전북민언련 주최특강. 『오마이뉴스』.
- 문종대 (2001). 저널리즘연구, 수요 전환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2001언론학대회 발표논문.
- 박거용 (2006). 경제논리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한 교육개방. 『황해문화』, 통권 52호.
- 방정배·손석춘·유한호·이효성 (1996). 죽은 언론 살리기. 서울: 언론노동조합연맹.
- 박은희 (2005). 수용자 복지정책 제도화를 위한 개념적 접근. 『변화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87~122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손석춘 (2005a). 노사정의 공론장과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2005년 3월호.
- _____ (2005b). 평화위기와 저널리즘의 정확성. 『신문과 방송』, 2005년 4월호.
- _____ (2006). 농촌저널리즘과 자살의 커뮤니케이션. 『신문과 방송』, 2005년 4월호.

- 송건호 (1974). 신문학교육의 반성. 『송건호전집 10』 (2002) (209~218쪽). 서울: 한길사.
- 양문석 (2003).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 분석: 2002. 12. 20~2003. 2. 19까지 2개월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3. 2. 26.
- 언론개혁시민연대 편 (2000). 신문개혁 이렇게 합시다. 한국신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 언론광장 (2004). 한국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기자 의식 조사.
- 이강수 (1973). 한국 신문학교육의 문제성과 방향. 『신문학보』, 6호 (69~95쪽).
____ (2000). 언론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001언론학대회 발제문.
- 이만규 (2001). 새로운 시대의 신문방송교육: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2001언론학대회 발제문.
- 이민웅 (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지속. 서울: 나남.
- 이재경 (2004).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 방송』 40주년 세미나 발표문.
____ (2005).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임석진 (1983). 철학사전. 서울: 이삭.
- 장호순 (2006). 신문산업 선진화와 민주주의: 신문시장의 다원화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언론재단 주최 발제문. 2006. 4. 5.
- 정연구 (2005). 한국 언론에는 농민이 없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5. 12. 2.
- 정연구·문철수·송윤숙 (1996). 신문공동판매제도 연구-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정연우 (2006). 포스코 건설노조 농성 관련 보도와 권·경·언 유착 문제와 대응.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6년 8월 11일.
- 차배근 (1989). 한국언론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창립30주년 기념토론회 주제논문집.
- 최창섭 (1997). 언론이란 무엇인가. 『교양언론학 강좌』. 서울: 범우사.
- 한국기자협회 (2006). 창립42돌 기념 전국기자 여론조사.
- 한국언론재단 (1995). UR대비 한국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_____ (2004). 수용자의식 조사.
- 한국언론학회 (2005). 변화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 Cunningham, Brent (2005). Working the Fringe. *CJR(Columbia Journalism Review)*,
2005. 11/12.
- Gillmor, Dan (2006). We the Media: Grassroots Journalism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Reilly Media*.
- Kovach, Bill & Rosenstiel, Tom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Publishers.
- Lippman, Walter (1954). *Public Opinion*. New York: McMillan Company
- McCollam, Douglas (2006). A Way Out?. *CJR(Columbia Journalism Review)*, 2006.
1/2
-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London: Arnold.
- Merrill, John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Meyer, Philip (2004). *The Vanishing Newspaper: Saving Journalism In The Information
Age*.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최초 투고 2006.9.1, 최종 원고 제출 2006.10.25)

The Substance of Crisis and Alternative Proposal in Journalism

Seok-Choon Shon

Guest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As a term 'Media Big Bang' will appear, the media is extending explosively. But actually it is appearing the paradoxical phenomenon which journalism meets a crisis.

If the purpose of journalism is 'to provide people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be free and self-governing', the crisis of Journalism directly brings about the result which damages audience welfare. Consequently the preceding task which defends the public good of journalism is accurately to get at the root of the substance which brings about the crisis of Journalism. In this paper, the principle and basic ethics of Journalism was theorized on the concept of truth and fairness, how about Korean journalism was answered to the standard is analyzed. With the result it was confirmed Korean journalism does not defend even truth and fairness about important agenda to be solved today. It was recognizes the substance which brings about the crisis of Journalism is 'the crisis of basic ethics', and was presented an alternative proposal. It was introduced the research of 'Committee of Concerned Journal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proposed the effort which is saved journalism with organic combination of Korean academic world and journalist' group.

Key words: truth, fairness, audience welfare, journalism, public sphere